

광주 ‘5·18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 재추진한다

강 시장 “국회에 협조·동의 요청”
“노벨상 수상, ‘세계 정신’ 승화”
오월단체 “환영...정부 등 나서야”
‘역사박물관 서적 5·18 왜곡’ 규탄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지역에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지난해 무산됐던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추진본부(이하 개헌추진본부)’ 구성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오월단체·유가족 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여기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의사박물관이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1948~2048)’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대목이 발견되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폐지하라고 성토했다.

광주시는 “저자 김진현은 뉴라이트가 주축이었던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어떻게 집필자로 선정됐는지, 책자 발간 의도는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5·18을 왜곡하는 책자가 국가기관



지난 5월17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광주시의원들이 5·18헌법전문 수록을 촉구 하고 있다.

의 이름으로 발간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과 취임사에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버젓이 5·18을 왜곡해 현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 있다.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발간된 책자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국가기관마저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현실을 통탄한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시장이 밝힌 국회 차원의 개헌추진본부 구성과도 연결된다.

강 시장은 “광주는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오월 정신을 세계 정신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게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겨 오월 정신이 세계 정신으로 나아갈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추진본부를 만들 때 국회의 협조·동의를 구하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이 말한 개헌추진본부는 지난해 8월 ‘5·18정신 헌법 수록 추진본부’라는 명칭으로 국민의힘 하태경, 성일종 의원

이 추진본부 상임대표직을 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도 참여해 총 4인체제로 구성됐다. 당초에는 그해 12월까지 200명 이상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겠다는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나 상임대표를 선정하는데서 멈췄다.

이런 추진본부를 개헌추진본부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의 재추진 의지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실제 국감에서도 민주당 채현일·한병도 의원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는 오월 광주의 아픔이 처절히 담겨 있다. 5·18 북한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명된

망언”이라며 “(뽕튀·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시는 국회·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개헌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요청하겠다”면서 “추진본부 구성을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 조만간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오월 유가족·단체들은 강 시장의 수위 높은 비판·촉구 발언에 공감하며 최근들어 다시 번지고 있는 5·18 왜곡에 대해 ‘당과 국회·정부에서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 화답하라’고 요청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아픔과 오월 정신을 세계적으로 알려준 감사한 작품이다. 이제 ‘광주 오월’은 이 지역 것만의 역사가 아니다”며 “정치인들은 5·18마다 ‘오월 기념관 등을 짓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정성 있는 정신 계승’이 우선돼야 한다. 정치권이 헌법전문 수록에 더욱 앞서주길 바란다”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현숙 열사의 언니 현옥씨는 “광주 오월은 모두가 인정하고 계승해야 할 민주적 가치가 있다. 최근 여러 정부기관 관계자들의 왜곡·편파 발언은 문제가 크다”며 “동생은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쳤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헌법전문 수록을 약속했던 만큼, 이제야 야당·여당이 힘을 합쳐 개헌 조속 추진을 진행해야 한다. 최소한 망자들의 억울함이라도 풀 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에 이어 2심도 당선무효형
이 군수 “대법원 상고하겠다”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사진)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비 225만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이 군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적이 없고 조의금 기부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당내 경선 전에 있었던 터라 선거와 무관하고 이 군수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변호사비 대납의 이익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변호사비 대납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직위상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대납 수사가 이뤄지자 피고인은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 입금을 받았고, 일부는 변호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였음이 인정된다”며 “법률 서비스 제공 행위는 당내 경선이 아닌 선거운동과 연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행위가 선거당선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부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고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내 경선과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비공개 회의서 난동...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형

“공정성 결여 징계 남발 항의한 것”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부상자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5·18부상자회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지난해 9월7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열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 회의에 무단으로 들어가 회의를 방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관계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 측은 “상벌심사위가 상벌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징계 처분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하다. 공개된 장소에 업무 집행을 위해 출입한 것은 건조물 침입일 수 없고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상벌심사위는 황 전 회장이 부상자회 이사회와 회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보수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공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점, 회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특전사회와 대국민선언을 한 점 등을 이

유로 징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재판부는 “상벌 운영 규정에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자신에 대한 징계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찾아간 점, 피해자로부터 출입 거부 의사를 받고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회의를 방해한 점 등을 비추어 회의 개최 과정이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을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상벌심사위원회 징계 회의 업무는 타인의 위법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의 횡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법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양금덕 할머니 ‘제3자변제안’ 수용... “尹 정권 책임”

“사죄 우선” 양 할머니...끝내 좌절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3자 변제안’ 수용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압살해 온 한·일 공조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죄가 우선’이라던 양금덕 할머니 측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위가 어쨌든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징인 할머니의 외롭고 고단한 투쟁이 여기에서 멈춰선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가족측과 접촉을 갖고, 제3자 변제에 합의키로 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가족 측에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할머니는 치매로 인지능력이 박약한 상태며,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금덕 할머니 측의 좌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 외교, 피해자의 목소리를 압살하기 위해 헌법 취지를 위반해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마저 뒤엎은 윤석열 정권에 그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공조해 자국민의 목소리를 압살하는 상황에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양금덕 할머니 측의 선택지는 갈수록 협소했다”며 “양금덕 할머니의 역사 투쟁은 여기서 멈췄지만, 윤석열에 맞선 역사 정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